



반란의
프랑스
2~5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유럽
6면

소방 “재정 빨대”
망언을 둘러싼 언쟁
7면

국제주의 관점에서 보는
한미 갈등
8~9, 10면

미국
중간선거
10면

이란 전쟁
파병 반대
1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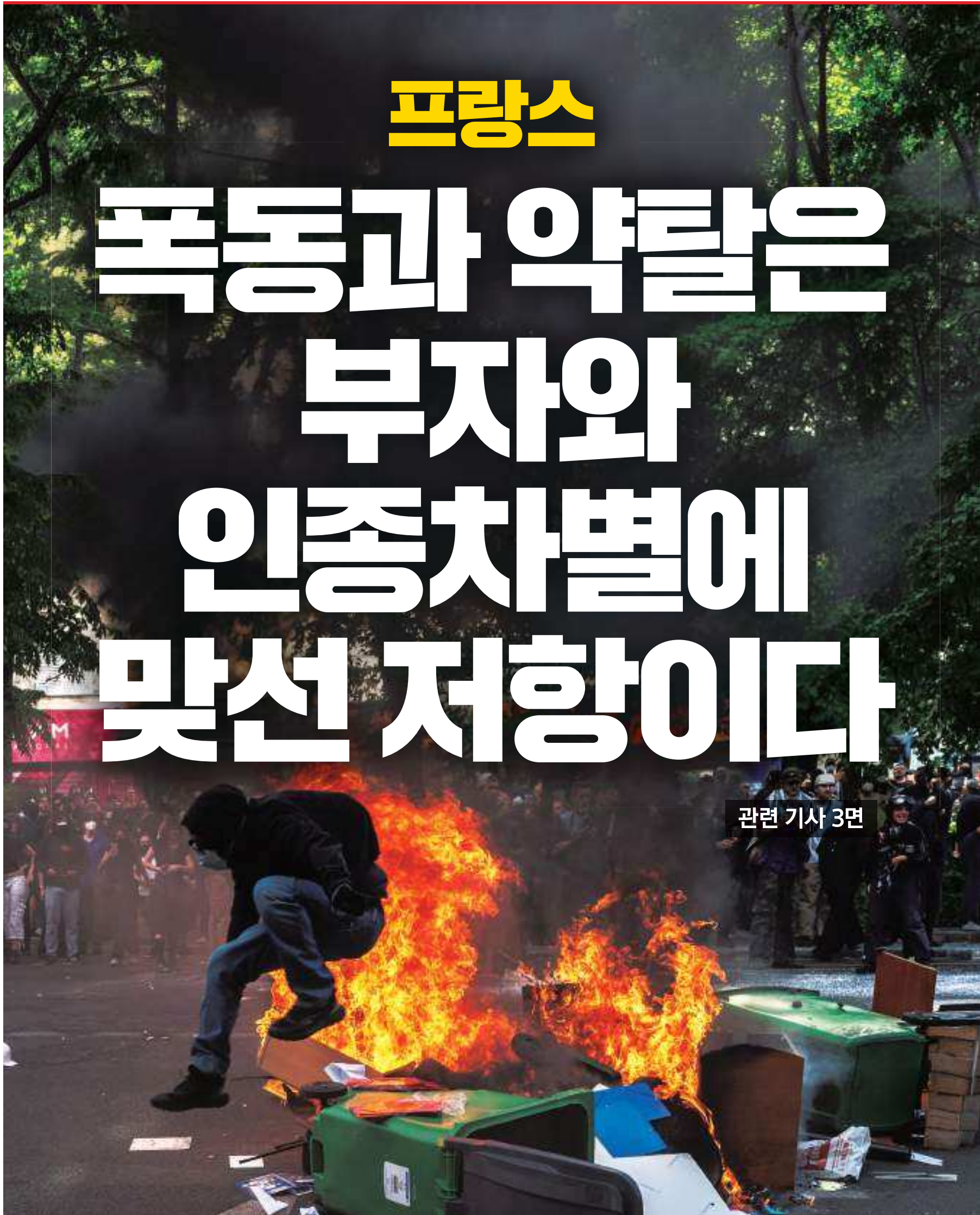
중국의 부상,
모순, 저항
11~13면



프랑스

폭동과 약탈은 부자와 인종차별에 맞선 저항이다

관련 기사 3면





사진제공: Guy Smallman

프랑스 거리로 나선 학생들의 목소리

“우리는 혁명을 바랍니다”

파리에서 커밀라 로일·가이 스몰만

10월 13일 화요일 청년 시위대가 또 한 차례 투쟁적 시위를 벌이며 프랑스를 뒤흔들었다.

파리 교외 빈곤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시작된 학교 봉쇄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돼 대학생과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10월 13일의 학교 봉쇄는 노조 조합원들이 동참하는 전국 곳곳의 행진을 앞두고 이뤄졌다. 기자가 방문한 파리의 엘렌부세 학교에서는 수백 명이 건물 입구에 모여 녹색 플라스틱 쓰레기 통으로 출입구를 막고 있었다.

신호가 떨어지자 학생들은 바리케이드를 도로로 끌고 나와 파리의 주요 간선 도로인 쿠르드뱅센을 봉쇄했다. 학생들 수에 밀린 경찰은 지원 병력을 기다리며 도로 주위에서 교통을 우회시키는 데 급급했다. 이후 승합차 여러 대를 타고 진압경찰(CRS)이 현장에 도착했다.

파리의 한 학생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에마뉼엘 마크롱과 그 정부가 퇴진하기를 바라요. 다친 친구들의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도 물론이고요.

“제가 낙관적일 수 있지만 저는 혁명을 바라요. 이것이 꿈이라면 마크롱을 단두대에 세우면 좋겠네요.

“우리는 너무 평화주의적이고 국가가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국가가 우리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데 말입니다.”

또 다른 학생인 바질 군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운동은 학교 봉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행동 방식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이럴 수 없다는 건 알

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차차 생각해 낼 거예요.

“당장은, 적어도 가을방학 전까지는 이곳을 지켜야 해요. 이 운동은 학생 주도 운동이고 노조가 운동을 가로채면 안 된다면 노조가 합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려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공공 서비스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투쟁을 이어갈 힘을 얻으려면 선생님들이 대거 파업에 나서서 우리 혼자 싸우지 않는 게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이 운동은 가혹한 경찰 탄압에 직면했고 몇몇 청소년은 끔찍한 부상을 입었다. 폭발로 손을 잃은 15세 청소년과 머리에 최루탄을 맞아 턱뼈가 골절된 14세 청소년도 있다. 지난달 운동이 시작된 이래 6,000명 이상이 연행됐는데 대부분이 18세 미만이다.

지난주 목요일(10월 8일) 늦은 밤 정부는 긴급 조치로 학교에 교사 3,000명을 추가 배치해 인력 공백을 메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는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 별 효과가 없었다.

총리 세바스티앵 르코르뉘가 약 530억 유로 규모의 삭감을 포함한 긴축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마당에 그런 약속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합류를 원한다”

화요일 아침 봉쇄 시위에서 만난 학생 엘리아 군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노동자들이 학생들과 함께 싸워야 해요. 모두가 우리의 투쟁으로 모여야 해요. 원하는 걸 얻으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 봐야죠.

“모든 노총과 모든 좌파 정당이 합류해 주기를 바라요. 그들의 도움을 원해요. 우리는 학생이고 모든 것을 봉쇄하고 싸워온 지 이미 2주 반이나 된 만큼 그들이 오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어요.”

엘리아는 경찰이 특정 지역을 더 집중 공격한다고 전했다. “여기는 경찰 폭력이 그리 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도로 전체를 막을 때나 그렇죠. 하지만 빈곤한 교외 지역에서는 경찰이 마구 날뛰어요.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때고 고무탄(플래시볼)을 쏩니다. 경찰은 인종차별적이고 동성애 혐오적이며 트랜스젠더 혐오적이에요.”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 에밀리 씨는 이렇게 말했다. “어른들이 이런 자리에 나와 학생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상황이 거칠어질 수 있거든요. 또, 반드시 물리적 폭력 때문이 아니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지쳐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의 반(反)파시즘 모임에서도 활동합니다. 이 시위에 함께 하면서 학생들과 파시즘 문제에 관해 대화하고, 극우 정당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다가오는 대선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 문제 역시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좌파 정당 라프레 소속의 다니엘 시모네 하원의원도 학생들을 지지하러 엘렌부세 학교에 왔다.

그녀는 학생들의 요구가 학교 예산 증액과 교사 충원에 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마치 1968년과 같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남을 운동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청소년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합니다. 모든 나라의 청소년들이 기후 문제 해결을 요구합니다. 모든 시위에서 우리는 국민연합(RN)에 맞서고, 극우에 맞서며, 인종차별과 유대인 배척에

맞섭니다. 우리는 평등을 지지합니다.”

소피 비네 노동총동맹(CGT) 위원장은 국가의 탄압을 규탄하고 학생들이 미래를 도둑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의 삶과 학업 조건이 이토록 악화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 세대는 기후 위기, 테러, 코로나19, 전쟁 속에서 자라났고, 이제는 인공지능(AI)으로 요동치는 직업 전망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총동맹(CFDT) 조합원인 올리비에 클레망 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노동조합들은 고등학생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게다가 학생들의 요구는 우리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리 거리에서 청소년 시위대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번 운동은 청소년·청년들의 행동이 체제에 대한 더 광범한 분노를 끌어모으는 파괴침 구실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지난주 목요일(10월 8일) 파리 바스티유 광장에 운집한 시위대는 곤봉을 휘두르며 돌격하는 경찰에 맞섰다.

대학생들은 캠퍼스를 봉쇄하고 대규모 총회를 열었다. 낭트에서는 수천 명이 총회에 참가했다. 일요일(10월 11일) 클레르몽페랑 시에서는 좌파 대선 후보 장뤼크 멜랑송이 이끄는 집회에 약 1만 명이 모였다.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인근 비트롤에서는 트럭 운전자들이 유가 인상에 항의하는 서행 시위를 재개해 교통을 마비시켰다.

이번 주 토요일(10월 17일)에는 생계비 위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예고돼 있다. 이 시위는 2018년 프랑스 전역에서 수만 명이 형광 노란 조끼를 입고 도로를 봉쇄한 ‘노란 조끼 운동’을 연상시킨다.

▶ 3면으로 이어짐

좌파는 프랑스 시위대의 폭동과 약탈을 옹호해야 한다

파리에서 커밀라 로일

지난 주말 프랑스에서 폭동이 벌어진 후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마녀사냥에 나섰다.

프랑스 국가는 청소년들의 학교 봉쇄로 시작된 이 운동을 악마화하고 분열시킬 기회를 포착했다.

프랑스 국가는 “극좌파 극단주의 자들”과 “범죄자”들이 일부 시위대의 “정당한 불만”을 가로챘다고 떠든다.

영국 국영 언론 BBC의 파리 특파원은 폭동 가담자들을 묘사하며 인종차별적 관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모두가 이해할 만한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운동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 운동에 극좌파의 의제와 방리외의 약탈자들이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다.” 방리외는 흑인과 이민자들이 사는 가난한 교외 지역이다.

좌파가 국가에 맞서 폭동 가담자들을 방어하지 않는다면 전체 운동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10월 19일 월요일 프랑스 총리 세바스티앵 르코르누는 파리 등 주요 도시에 부분 통금령을 내리라고 지방 당국들에 요구했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폭동 가담자들이 “젓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탄압이 모든 파업 참가자들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자행될 것이다.

그런데 곳곳에서 이와 비슷하게 폭동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심지어 일부 좌파도 그러다.

예컨대 프랑스 노동조합 연맹의 하나인 ‘노동자의 힘’(FO)은 노골적인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폭동과 약탈은 빈곤과 차별, 폭력에 맞선 분노의 표현

“사업체, 시청, 공공기관 건물, 지역 사회 시설에 대한 공격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사회적 어려움에 폭력과 파괴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폭력과 파괴가 평화 시위의 적법한 요구를 폄하하는 데 이용돼서도 안 된다. 정부는 그런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급진 좌파 정당 불복종프랑스(LFI)의 대선 후보 장뤽 멜랑송도 “약탈·강탈 행위”와 거리를 두고 있다. 멜랑송은 SNS에 이렇게 썼다. “권력층의 책임이 무엇이든, 그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폭력적이든, 우리는 정치적 의미도 없고 우리 방식에도 어긋나는 행동에 가담하기를 거부해야 한다.”

멜랑송은 공공 질서 붕괴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옳게도 청소년 시위대의 요구를 지지한다고 재차 밝혔고 경찰 폭력에 맞서는 학생 시위대에 연대를 표했다.

그러나 약탈에 “정치적 의미”가 없

다는 멜랑송의 말은 틀렸다.

폭동은 정치적인 것이다. 폭동은 프랑스 곳곳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유층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또한 흑인·아랍계 청년들을 특히 겨냥하는 경찰의 괴롭힘과 폭력을 낚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에 맞선 저항이다.

약탈에 가담한 사람들의 다수는 교외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프랑스가 부유한 나라라는 말을 듣지만, 실제로는 갈수록 심해지는 불평등과, 근대적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극심한 빈곤에 시달린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체제 속에서 부대끼고 있다. 프랑스의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 지위 상승을 이루기가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어렵다.

동시에 청년들은 최신 유행 브랜드의 옷과 운동화가 가치와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듣고 산다. 그런 물건을 조금 훔치는 것은 그 청년들이 살면서 겪는 부당함에 보상받고 삶의 통제력을 조금

이나마 되찾는 한 방법인 것이다.

토요일 시위 이후 폭동이 광범하게 벌어졌다는 사실은 그 폭동을 ‘점잖은’ 대다수 시위대와 구분되는 극소수만의 행동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폭동 때문에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RN)으로 주도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합이 범질서를 회복시킬 세력을 자처하기 때문이다. 국민연합 대선 후보 마린 르펜은 현재 대선 후보 선호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운동의 기세를 누그러뜨리거나 선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는 파시즘을 꺾을 수 없을 것이다. 거리에서 자신감 넘치는 운동으로 파시스트들의 당대회와 행동에 맞서야 한다.

혁명적 좌파 단체 ‘계급 독립성’의 지적처럼, 우리 편이 전진하지 못할 때 파시스트의 위협은 더 커질 것이다.

폭동은 파업과 다르다. 폭동에는 파업과 같은 민주적·집단적 성격이 없다. 폭동은 일터에서 벌어지는 착취와 이윤 축적을 직접 타격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가끔은 폭동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다친다.

그러나 폭동에 대한 우리의 비판은 폭동이 충분히 멀리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어야지, 폭동이 ‘점잖은’ 시위의 초점을 흐린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프랑스 국가가 웃가지 몇 벌과 신발 몇 켤레를 훔친 청소년들을 잔혹하게 탄압할 채비를 갖추는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들은 그 청소년들을 방어해야 한다. 그러면서 대중 파업과 점거를 더 널리 촉구해야 한다.

출처 Camilla Royle in Paris, ‘The left should defend riots and looting in France’ (2026. 10. 19) / 번역 김중호

▶ 2면에서 이어짐

일부 좌파 인사들은 학생들의 폭력을 규탄했다. 예컨대 비네 CGT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학생들의 방식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교직원이나 시설을 향한 폭력은 마땅히 규탄해야 한다.”

그러나 폭력을 휘두르는 주체가 압도적으로 경찰임을 아는 대학생과 노

동자들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연대를 표하려 한다.

운동의 다음 행보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주 금요일(10월 16일)이 지나면 학교들은 2주간의 방학에 들어간다. 과연 봉쇄 운동이 유지될 수 있을까?

노동자들이 대거 싸움에 동참해 산

업의 일부를 실제로 멈춰 세우고 정부의 예산안 철회를 강제할 수 있을까?

이 운동이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연합(RN)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학생들은 파시즘 반대 구호를 외친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은 10월 24일에 열리는 국민연합 당대회를 방해하기 위한 행진에 참가하고 국민연합이 기반을 다

지는 것을 저지하는 데에 함께할까?

이 모든 것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운동이 더욱 심화하고 발전해 프랑스 국가와 그 국가가 수호하는 체제에 맞서는 대결로 나아가야 한다.

출처 Camilla Royle and Guy Smallman in Paris, ‘We hope for revolution’: students on streets of France’ (2026. 10. 13) / 번역 김중환

현재 국제 정세에서 단연 중요한 사건은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투쟁일 것이다. 시위대는 혁명을 원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것은 레닌과 초기 제3인터내셔널이 크게 기여한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그 전통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전쟁과 혁명”이 본질적 특징인 자본주의의 최근 단계다.

지금의 전쟁의 시기라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혁명의 시기라는 것은 그다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좌파가 위기를 겪는 가운데 많은 좌파들이 혁명을 망각한 탓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투쟁은 지금이 혁명의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명백한 사례다.

이러한 분출(프랑스뿐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다)의 근본적 원인으로 제국주의 체제의 위기가 있다. 특히,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중동에서 패배에 직면하고 있다.

역사에서 제국주의 전쟁의 패배는 언제나 커다란 위기를 낳았다. 지배계급을 분열시키고 노동자들과 피억압 대중의 자신감을 높였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국주의 전쟁의 패배

제국주의 위기뿐 아니라 경제 위기도 중요한 원인이다. 프랑스 투쟁을 촉발한 것은 대대적인 교육 예산 삭감, 연금 공격, 군비 증강이었다. 불평 등 같은 사회적 문제가 제국주의 문제와 얽혀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프랑스가 2008~2010년의 그리스와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게다가 프랑스뿐 아니라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국가 부채 위기를 겪고 있다.

문제는 국가 부채만이 아니다. AI 거품을 둘러싼 불안정도 커지고 있다.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특히 미국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세계적으로도 생산 자본의 재편과 확장을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막대한 투기로 추동되고 있다.

이제 AI 거품이 금융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AI에 투자한 거대 기술 기업들의 향후 수익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유력해지면서 그 기업들은 차입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벼랑 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거품이 언제 터질지 예측하

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거품이 있고 그것이 터질 것임은 확실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쟁이 확산하는 경향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확산되는 분출이 정치 위기를 낳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이런 위기의 첨단에 있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전면적인 경제 구조 개혁이 관철되지 못한 채 프랑스 정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교착 상태 속에서 등장한 마크롱도 이제 완전히 마비됐다.

그러자 프랑스 자본의 일부는 돌과 구를 열 세력으로서 파시스트인 국민연합에 기대를 걸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분출한 저항은 이러한 국민연합의 전진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국민연합의 지도자 르펜은 현재 저항에 대한 국가 탄압을 지지하고 있고, 급진좌파 정당 ‘불복종 프랑스’의 멜랑송은 탄압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아래로부터의 운동 덕분에 한껏 부상하고 있다.



사진 출처: Unite CGT

이렇게 생각한다 “전쟁과 혁명의 시대”에 프랑스 투쟁을 보다

프랑스 정세가
1968년 5월과
비슷해진다지만,
당시 혁명적 좌파의 부활은
결코 저절로 이뤄진 게
아니다

한편, 프랑스가 위기의 첨단에 있기는 하지만 이런 역학은 훨씬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이 분명 그런 사례다. 그리고 그 전까지 강력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전개돼 온 이탈리아에서도 이를 따라잡고 있다. 심지어 알바니아에서도 거대한 사회 운동이 분출하고 있다.

단지 유럽만의 현상도 아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극우 밀레이 정부에 맞선 강력한 학생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인도에서는 청년들의 ‘바퀴벌레 운동’이 다시 분출해 극우 모디 정부의 극심한 국가 탄압에 맞서고 있다. 튀니지에서도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항쟁을 촉발하는 조건이 유럽 너머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국힘의 극우 대표 장동혁이 한국을 걱정하는 것도 기우는 아닌 것이다.

프랑스에서 1968년 5월 노동자 1,000만 명의 파업과 같은 일이 재현될 조짐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놀랍지 않은 상황이다. 위기와 저항이 국경을 가로지르는 속도도 그때와 비슷하다.

1934~35년과의 유사성

그러나 1934~35년과의 유사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1930년대에도 프랑스에서 극우가 전진했다. 자신감을 얻은 극우는 1934년 2월에 거리에서 준(準)쿠데타를 감행했다.

이는 노동계급의 거대한 반발을 불러 일으켜 공동전선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더 많은 세력의 결집”이라는 명목 하에 부르주아 정당과의 협력을 포함하는 민중전선의 출범으로까지 이어졌다. 민중전선 정부가 들어선(1936년 6월 5일) 후에도 한동안 대중파업과 공장 점거의 물결이 일어났지만, 민중전선 정치는 결국 이러한 투쟁을 벌인 노동자들을 동원 해제시켰다.

한국의 우리는 지금 민중전선 정치의 난점과 잠재적 위험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선거 전부터 우경화를 천명했고 그후 지지율

이 급격히 추락해 몇 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지만, 민중전선적 좌파는 이제 명 정부에 맞서 아래로부터 저항을 조직하기를 회피하고 있다.

민중전선 정치는 2년 전 프랑스에서도 '불복종 프랑스'와 사회당 등으로 이뤄진 신민중전선을 통해 나타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프랑스에서 그런 연합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을까? 현 재로서는 신민중전선이 재가동될 가능성 보다는 신민중전선을 이뤘던 세력들 간에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그때보다 멜랑송의 '불복종 프랑스'와 더 온건한 개혁주의자들 사이에 정치적 거리가 더 멀어졌기 때문이다.

사회당을 비롯한 프랑스의 중도좌파 세력은 최근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 라파엘 글렉스만 유럽의회 의원을 자신들의 후보로 선정했다. 그는 주류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중도좌파 내 극우라고 할 만한 자다.

반면, 멜랑송은 꽤 강경한 좌파적 입장들을 고수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입지를 다져 왔다. 예컨대 멜랑송은 올해 초 반파시즘 시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한 파시스트 강파의 죽음을 애도하라는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고, 현재 분출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위를 옹호하고 있다.

비록 대선(내년 4월 18일과 5월 2일)이 가까워질수록 얼버무리는 입장을 취할지도 모르지만, 현 국면에서 '불복종 프랑스'의 연사는 거리 행동을 고무하고 있다. 이것은 멜랑송 자신의 실제 좌경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물론 선거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이기도 할 것이다. 대선 전까지 투쟁을 지지하면서 선거적 경쟁을 벌이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기 때문이다.

세 주요 전선

이처럼, 제국주의 문제와 더 구체적인 계급투쟁의 쟁점들, 심지어 선거 정치까지 서로 긴밀하게 얹히고설켜 있는 국면이다.



프랑스의 상황은 지금이 '전쟁의 시기'일 뿐 아니라 '혁명의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일깨운다

현 상황에서 중요하게 떠올라 있는 전선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반전 운동이다. 전쟁(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반대는 운동 내에 광범하게 퍼져 있고, 운동이 정치화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프랑스 시위대가 팔레스타인 지지 구호를 외치고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드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물론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전보다 동원 수준이 조금 줄고 일부 나라들에서는 교착 상태에 있다.(물론 10월 말 국제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과 행동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럼에도 팔레스타인 연대/전쟁 반대 운동은 국제적으로 급진화의 초점이자 토양 구실을 계속 하고 있다.

무슬림이 많은 프랑스의 방리외(도시 외곽 노동계급 거주 지역)에서 멜랑송이 지지를 구축한 비결 하나는 바로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권력자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것이었다. 온갖 사회·경제적 쟁점들로 시위가 분출하고 있는 스페인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곳이라는 사실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둘째 전선은 반파시즘 운동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단지 지금 프랑스, 독일 등지의 정치 위기와, 선거에서 전진하고 있는 극우·파시스트들의 위협 때문만은 아니다. 항쟁의 분출이 반파시즘 투쟁의 고양으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이제 10월 24일 오를레앙에서 열릴 파시스트 국민연합(RN)의 당대회를 겨냥한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반파시즘 운동이 고조되면 극우가 설치



팔레스타인 연대는 급진화의 토양 구실을 계속 하고 있다

는 다른 모든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전선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둘러싼 투쟁이다. 프랑스의 투쟁뿐 아니라, 주택 문제를 둘러싼 스페인의 거대한 시위들이 그 중요성을 보여 준다.

혁명가들은 단지 각각의 운동을 세 전선에서 건설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혁명가들은 세 전선을 연결시켜 운동을 전면화시키려 애써야 한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가 체제 전체의 위기이고 대안은 노동계급이 중심에 있는 혁명임을 주장해야 한다. 혁명가들은 현재의 분출에서 두드러지는 전략 부재를 메우기 위해서도 해야 할 구실이

있는 것이다.

청년들의 광범한 급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앞서 언급했듯이 프랑스 상황이 1968년 5월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 시기는 혁명적 좌파가 부활한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부활은 결코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금은 (개혁주의의 좌파는 물론이고) 좌파 전반이 상당히 우경화해 있다. 이것은 많은 나라들에서 극좌파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혁명적 좌파의 재건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현 상황은 그 과제를 수행할 기회를 (한국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 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프랑스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다: 프랑스 저항의 배경, 전개, 전망

발제 드니 고다르 프랑스 인종차별 반대 연대체 '연대의 행진' 조직자, 프랑스 혁명적 좌파단체 '계급독립성' 회원

일시 10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 ※ 전문통역사의 한-영 통역제공

장소 서울 교원투어빌딩 지하4층강연장 (종각역 5번 출구 도보 5분)

참가비 6,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서울 지역모임들 문의 010-4909-2026 / wsorg@ws.or.kr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 지배자들은 트럼프가 아무리 모욕해도
굽실거릴 수밖에 없다

지난주 수요일 영국 노동당 총리 앤디 버넘은 총리 관저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맞이하려고 아일랜드 근위대를 고틀 모자와 진홍색 상의까지 갖춘 정복 차림으로 도열시켰다. 그러나 이런 최고 수준의 의전과 우크라이나를 “흔들림 없이” 지지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버넘은 최근 젤렌스키와 도널드 트럼프 다툼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이런 줄타기는 유럽 자본주의의 위태로운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유럽 지배자들은 군비 지출 증대를 정당화하려고 블라디미르 푸틴 치하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에 관해 떠들지만, 여전히 트럼프와 미국의 권력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다. 제국주의 국가들(유럽 자신도 포함해) 사이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유럽 지배자들은 그 파괴적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는다. 지난 일요일 트럼프는 이렇게 썼다. “유럽이 퍼 주고 있다고 소문난 그 많은 돈을 갖고도 ... 그는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마 처음부터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벌어진 두 대통령 간의 유명한 충돌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은 개인들의 성격 문제가 아니다.

갈등이 벌어지는 주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전략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기적인 것이다. 첫째,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 사이에서 커져 온 적대를 끝내고 싶어 한다.

트럼프는 유럽 동맹국들이 스스로 러시아를 억제해야 한다고 여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가 푸틴과 타협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부추겨 러시아를 묶어 두려 하지만, 이는 확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백악관의 전략이 일관성과 정합성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파의 구상은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들인 미국·중국·러시아가 세계를 지역 세력권으로 분할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파는 유럽의 동맹국들이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느낀다면 그들 스스로 군비 지출을 늘려 러시아를 억제해야 한다고 여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가 푸틴과 타협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푸틴과 타협하면 트럼프 일가와 측근들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 거래의 길이 열릴 수도 있는데 말이다.

둘째, 백악관 전략의 일관성 결여를 보여 주는 한 가지 측면으로서, 트럼프가 1945년 이후의 모든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세계를 제 손아귀에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난 2월 베냐민 네타냐후와 함께 이란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물론 그 전쟁은 그들에게 매우 나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란 정권은 무너지지 않고 버텼고 드론·미사일을 이용한 정밀 타격 기술을 능수능란하게 이용해 반격하고 있다.

이제 이란의 동맹인 안사르알라(예

멘의 ‘후티’)가 같은 기술을 동원해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아라비아반도 지배를 위협하고 있다. 그 결과 석유와, 경유 등 정제유의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물가를 끌어올려 각국 집권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공화당도 그중 하나다.

정밀 타격 기술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지상전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양측 모두 정밀 타격 기술에 갈수록 더 의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정유소와 데이터센터 등 러시아의 기간 시설을 타격해 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간 목표물과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고 있다.

트럼프는 러시아로부터 경유를 받는 대가로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있다. 또, 러시아 정유소 타격을 중단하라고 젤렌스키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조치로 중간선거 전에 경유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기를 트럼프는 바란다. 그러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는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이다. 에너지 위기의 근원이 중동에 있기 때문이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비용을 대는 일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한 우크라이나 관리가 말한 “미국의 3중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정보 독점,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의 독점, 스타링크 위성망과 그것의 군용 부분인 스타실드의 독점이다. 이런 것들 없이는 미사일·드론 전쟁을 치를 수 없다. 최근 며칠 사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스타실드가 느려졌다. 물론 스타링크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자기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잡아땀다.

이 갈등으로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우기를 바란다. 그래야 러시아라는 무시무시한 꿈을 먼 곳에 묶어 둘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더러 러시아 영토를 더 무차별 공격하라고 부추기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결과는 정반대, 즉 핵전쟁을 향한 확전일 수도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가능성이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은 유럽 자본주의가 여전히 미국 제국주의에 안보를 의존한다는 것이다. 유럽은 정치적으로 여전히 분열돼 있고, 유럽의 주요국들은 국내 정치의 마비에 시달리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국제 시장이 그 나라의 부채 수준을 불안한 눈초리로 쏘아보고 있다. 그래서 유럽 지배자들은 트럼프가 아무리 괴롭히고 모욕해도 계속 그에게 굽실거릴 것이다.

번역 김종환

“소방은 재정 빨대” 망언 둘러싼 언쟁 추미애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국힘 모두의 내심

10월 19일 부천 금속 도장공장 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치러졌다. 올해에만 네 번째 소방관 순직이다. 김 소방위는 공장 안에 인화 물질 180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가 고립됐다.

화재 사흘 전, 경기도지사 추미애는 국감에서 소방을 두고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뛰는 소방관들을 단순한 예산 낭비 요인이자 재정 짐으로 치부한 것”이다(10월 14일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긴축

올해 8월 추미애는 경기도의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긴축**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각종 복지 예산과 함께 소방 분야의 사업 예산도 삭감됐다.

소방차량·구조장비·전문구급장비 보강 예산이 33억 5,000만 원 감액됐고, 재난 물자를 비축하고 오염된 방화복을 세탁할 물류창고 사업은 보류돼 8억여 원이 깎였다. 물류창고 사업은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추진했던 사업이다.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 예산 1억 원도 통째로 없어졌다.

전검재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경기소방지부 사무국장은 추모 예산 삭감이 단지 “돈 문제가 아니고 … 소방을 바라보는 마음의 문제”라고 말했다(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비판이 거세지자 추미애는 “재정 빨대” 발언 나흘 뒤 고인의 빈소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 말이 중앙정부의 소방 예산 지원 부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해명했다.

중앙정부의 소방 예산 지원 부족은 참말이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14일 성명에서 이미 이렇게 촌철살인의 지적을 했다. “불완전한 현실이 문제라면 국비 지원 비중을 높여 달라고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올바른 책무다.”



순직 뒤에는 영웅 대접, 살아 있는 때는 비용 취급 10월 19일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

이재명은 추미애와 선을 그으며 16일 “그분들[소방관]에게 천금을 준들 아깝겠습니까” 했다. 그러나 정부의 소방 예산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

정부가 9월에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의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장비 등에 국비 지원)는 올해보다 2,898억 원(27.6퍼센트) 줄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소방공무원을 5,000명 늘릴 계획인데, 인원은 늘리겠다며 정작 교부세는 줄인 것이다.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 세수가 줄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람을 구할 인력과 장비 비용이 담배 판매량에 좌우되는 구조를 바꿀 생각은 없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랠리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가 기존 예상치보다 약 63조 원 늘었는데도 투자 확대(자본 축적)는 고민하면서 보통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쓸 돈은 우선순위 안에 없다는 게 정말로 고약하다.

열악한 처우 개선과 대형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20년 소방관을 여야 합의로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여전히 국비 지원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올해 소방 예산의 국비 지원 비중

은 11퍼센트에 불과하다. 나머지 90퍼센트가량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 탓에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도 제각각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9일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비 지원 확대는 당연한 일이지만, 소방관 순직 때마다 처우 개선과 국비 지원 약속이 거듭 나왔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온 탓에 순진하게 믿고 있기는 어렵다.

국힘 위선

한편, 국민의힘은 “도민 혈세 빨아 먹는 ‘재정 빨대’는 추미애 지사 본인 [최근 구입한 고가 관용차를 말함]이라며(장동혁) 추미애 사퇴를 요구하지만, 그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위선의 극치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동안 전국 시·도에 배치되는 소방관 정원은 단 1명 늘었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의 75퍼센트를 소방에 쓰도록 한 규정마저 없애려 해 소방청과 맞선 바 있다.

지금 국힘은 정부 예산을 두고 “팽창 예산의 폭주”,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으로 긴축의 관점에서 규정하고, 채무 상환을 우선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채권자는 국채를 사들인 투자자이므로 특히 자본가들인 것이다.

소방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은 위험한 일을 하는 노동자의 권리이자 재난 대응의 기본 조건이다. 김진석 소방위의 안타까운 순직 이후 찬사와 약속들이 쏟아지지만, 여야 정치권 모두 소방관이 안전하게 일할 인력과 예산을 “재정 빨대”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성지현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 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이재명 정부의 위기와 극우의 공세 — 좌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일시 10월 28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 한국열린평생교육원 5층 강의실 (부평역 1번 출구 앞 50미터)

발제 김문성 <친위 쿠데타, 극우정치, 민주주의> 공저자, <노동자 연대> 기자

참가비 5,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인천 지역 모임 문의 010-6224-2157 / incheon@ws.or.kr

한미 갈등: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이재혁

지난해 이재명 정부는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서 여러 차례 “모범 동맹”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동맹 간 협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 관계의 불협화음도 거듭되고 있다. 최근에도 대미 투자, 이란 전쟁 파병 문제 등을 놓고 한미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관련 기사: 본지 602호, ‘한미 관계 불협화음을 빌미로 이란 전쟁 파병을 재촉하는 우파’)

원인은 트럼프 정부의 점증하는 압력이다. 특히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은 노골적인 제국주의적 언사를 잇달아 내놓으며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깊숙이 끌어들이려는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최근 브런슨은 안보 환경과 군사 계획이 바뀌었으므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방침에 또다시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미군기지의 존재와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은 남는다.

그렇지만 브런슨의 전작권 발언은 한국을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의 장기 짝으로 여기는 관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가장 최근에 브런슨은 남측 DMZ



한국과 미국은 동맹으로서 협력도 하지만, 그 안에서 ‘국익’을 계산하며 갈등도 한다

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발언도 했다.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

대중국 전초기지

물론 정전협정에 따라 남측 DMZ의 관리 권한은 유엔사에 있다. 그러나 브런슨의 DMZ 발언은 한반도에서 제국주의적 통제력을 놓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그런 점에서 여권이 지난 9월 DMZ 지뢰 폭발

때는 유엔사의 DMZ 관리 권한을 인정했다가 지금은 “영토 주권”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는 데서 전혀 못 믿을 세력임을 보여 준다.)

이번에 브런슨은 한국에 다영역특임부대(MDTF)를 배치하고 싶다는 말도 했다. MDTF는 최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 강대국을 상대하기 위해 새로 창설한 부대다.

브런슨의 이번 발언들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놓고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강조하고, 한국을 중국을 겨냥하

는 불침함모, 단검에 비유한 것의 연장선이다.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보는 미국의 제국주의자들은 한국인들 대부분을 엄청난 위험에 몰아넣는 짓을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이재명 정부 압박은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지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심지어 여권 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재명 정부를 압박해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대미 투자 등을 얻어 내려 한다.

미국과 긴장을 빚는 이재명 정부는 반제국주의적인가?

우파는 한미동맹이 위태롭다며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이 “굴종, 사대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민족주의적 언사가 늘고 있다.

반미 자주파를 비롯한 좌파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듯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재명이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 개입 파병 없다”고 한 것을 미국에 맞서 자주적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기도 한다.(그러나 이재명의 그 기자회견은 기만이다. 관련 기사: 본지 599호, ‘호르무즈 파

병은 이란전쟁 참전이 아니라는 거짓말’)

지난해 이맘때 이재명이 활짝 미소를 띤 채 트럼프에게 왕관을 선물하던 것을 생각하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좌파 민족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에 맞서 자주적 행보를 확대해 갈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트럼프와 긴장을 빚는 이유로 이재명 정부가 반제국주의로 나아가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재명의 “굴종, 사대 지양” 발언은 미국과의 동맹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는 같은 국무회의에서 한

미동맹을 외교의 핵심 축으로 삼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미국 패권의 상대적 약화는 한국 지배계급이 자신의 경제적·군사적 역량에 걸맞은 독자적인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도록 자극하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는 이제 세계적 대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 군사력은 세계 5위권으로 올라섰다. 그런 성장의 주요 무대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 지역이다. 그러나 그 질서가 약화되고 있으니 미국으로만 ‘몰빵’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적 실용 외교’는 그런 이해관계의 표현이다. 한

미동맹의 현대화 틀 안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늘리고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동시에, 그보다는 덜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관계도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독자적 이익과 운신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적 국익 외교’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요컨대, 이재명 정부는 제국주의 질서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그 속에서 하위제국주의 국가로 도약하려 한다.(본지 586호, ‘[긴 글] 한국은 하위제국주의 국가인가? — 잠재태와 현실태’)

한국의 독자적 영향력 확대가 오히려 미국과의 협력을 재촉한다

그런데 제국주의 간 경쟁 격화 속에서 이재명의 줄타기는 점점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이 대중국 견제에 더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고, 이란 전쟁에도 파병으로 정치적·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를 바란다.

특히 파병 문제에서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다. 핵잠수함 등 핵무장 제한 해제, 대미 투자를 통한 미국 시장 진출 확대, 전작권 환수 등 한국 자본주의가 하위제국주의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일들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한국이 파병의 대가로 미국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파병은 이란과의 충돌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기 때문에 한국도 한국의 요구는 많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전쟁 파병 없다”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는 청해부대 활동 강화는 불가피하다고도 동시에 밝혔다. 10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오만만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하는 파병 연장 동의안을 준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맹 관계 속 갈등

이재명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파병을 어떻게 거부할 것인지가 아니라 파병의 형태와 명분이다. 호르무즈해협 목전인 오만만에 이란군으로부터의 선박 안전을 빌미로 군함과 초계기를 보내는 것은 명백히 미국의 이란 전쟁을 군사적·정치적으로 돕는 행위다.

요컨대 현재 미국과 한국은 동맹으로서 협력도 하지만, 동맹 관계 속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쟁도 하기 때문에 갈등과 긴장도 빚는 것이다.

한국 지배계급은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에 의존하면서도 그 안에서 더 큰 이익과 권력과 자율성을 확보하려 한다. 미국은 성장한 한국이 더 많이 안보 부담을 나눠 지길 바라지만, 한국의 독자성이 미국 패권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려 한다.

그래서 통일부장관 정동영이 이렇게 역울함을 토로한 것이다. “지난 73년간의 일방·수혜적 한미동맹에서 쌍방·호혜의 한미동맹으로 가는 과정에서 긴

장은 발생할 수 있다. 이걸 동맹이 파탄 난 것처럼 몰아가는 건 과도하다.”(〈한겨레〉 10월 19일 자 인터뷰)

한미동맹 강화와 한국의 독자적 역량 확대가 언제나 반대 방향인 것은 아니다. 지금은 나란히 가고 있다. 가령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리농 농축 권한 확보, 전작권 환수 등 한국의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는 데 미국의 협력이 핵심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급속히 무기화하는 AI에 대한 미국의 기술 패권에 한국이 적극 협력하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런데 좌파 민족주의자들은 ‘진정한 국익’이나 ‘진정한 자주국방’을 요구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이것은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 추구 방식에 대해 혼수를 두는 셈이고, 기본적으로는 한국 자본주의 지지를 전제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은 전혀 평화 애호적이지도 않고 무엇보다 노동계급의 이익을 거스른다.

이재명은 우파의 안보 공세에 응수하듯 10월 8일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했다. 그러자 며칠 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했다. 게다가 이재명의 핵잠수함 도입 시도는 동아시아 핵 경쟁의 일부다.

이재명 정부는 동아시아의 살벌한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는 한 당사자이고, 세계 곳곳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등 세계적 군비 경쟁에 일조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런 군비 증강은 한국 자본주의의 국제적 위상(‘국격’)을 높이고 무기 기업들과 대기업들에 새로운 이윤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배계급에게는 필수적 이익이 되는 일이다. 반면 주거와 복지 등 보통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에 투입할 재원을 잠식하고,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키운다.

그런데도 좌파 민족주의자들은 ‘자주국방’을 지지하고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우기까지 한다. 하위제국주의를 지향하는 한국 자본주의 국가의 군사력 증강을 사실상 응원할 위험에 스스로 빠지는 것이다. 또한 자주국방 지지

따라서 한국의 독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 종종 오히려 미국의 요구에 협력하도록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란 전쟁 파병을 추진하는 것처럼 말이다.

한미 갈등을 단순히 미국에 굴종하느냐, 자주적으로 행동하느냐의 문제로 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극우와 국민의힘 등 우파는 미국 제국주의에 더 확고히 밀착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여당 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위성락과 김정관 등).

‘국익’의 구체적 내용과 추구 방식에 대해서는 종종 지배계급 내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 무엇이 국익이냐를 놓고 정치적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기 일쑤인 이유다.

그러나 현재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해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삼고, 자본주의 국가들의 지정학적 경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정부와 국힘, ‘자주파’와 ‘동맹파’ 사이에 근본적 이견이 없다. 차이는 그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과 방법에 있다.

국제주의적 반제국주의 투쟁이 필요하다

같은 일은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노동계급 형제자매까지 적대하게 되는 논리를 내포한다.

좌파 민족주의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자주적 국익’을 추구하며 트럼프의 포식성 제국주의에 맞서고 미국과는 다른 독자적 행보를 보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보다 계급을 가로지르는 국민적 단결을 우선하면 이재명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요구를 제출해야 한다는 자기제한성의 유혹과 압력을 받게 된다.

또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으면 친미 행보에 대한 실망과 독자적 목소리에 대한 희망 사이를 오락가락하게 되고, 이는 개혁 열원 대중에게 혼란과 방향감각 상실을 안겨 주게 된다. 반제국주의 운동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미국 제국주의의 압박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제국주의적 압박의 존재가 한국이 미국의 종속국이거나 제국주의적 억압을 당한다는 뜻은 아니다. 좌파는 이재명 정부의 하위제국주의 지향과 군사주의, 친자본주의에 맞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제국주의는 미국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이지만, 제국주의는 자본 간 경제적 경쟁과 국가 간 지정학적 경쟁이 결합된 체제다. 이재명 정부는 그 체제를 거스를 이해관계와 의지와 능력이 없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한국 자본가 계급의 이

익을 도모하려 애쓴다.

관련해서 프랑스에 대해 짚을 것이 있다. 적잖은 사람들이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종종 미국과 다른 독자적 행보를 보이는 것을 호평하고, 이재명 정부에게 프랑스 정부처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지어 프랑스를 ‘중견국 연대’ 상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도 제국주의 열강의 일부다. 프랑스 정부는 미국과 종종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해 그렇게 했다. 지금 프랑스의 학생·노동자 시위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내팽개친 채 전쟁과 무기에 돈을 퍼붓는 것에 항의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외교는 그것이 독자적이라고 해서 진보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독자성, 자주성이 어느 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이고 그렇게 보면 자본주의 국가의 외교는 자본가들의 이윤 축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게다가 자본주의 외교는 온갖 수상쩍은 일을 밀실 합의와 비밀로 처리하는 전혀 비민주적인 영역이다.

국제주의자들은 제국주의에 맞서는 데서 자국 정부의 외교에 희망을 걸지 않는다. 진정한 희망은 자국 정부의 친제국주의와 군사주의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투쟁과 국제 연대에 있다. 이재명 정부의 파병 계획을 반대하고, 전쟁 지원과 군비 증강에 반대하는 독립적인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 10면으로 이어짐

▶ 9면에서 이어짐

전작권 환수에 대한 국제주의적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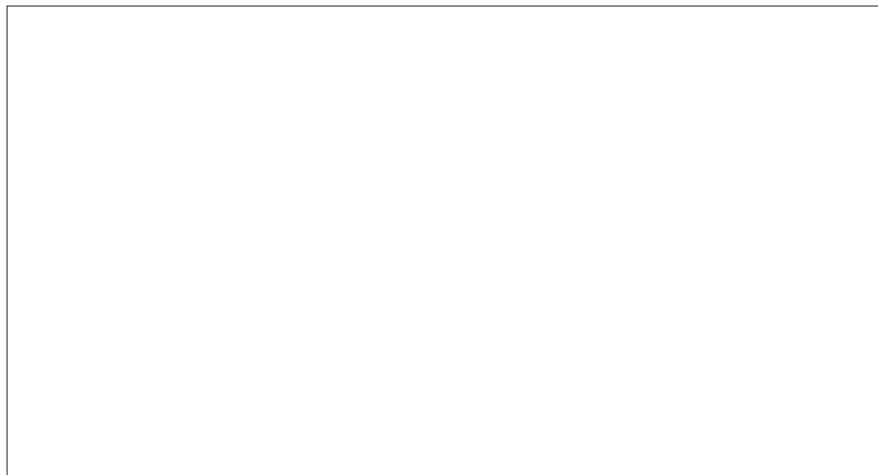
진보당 등 반미 자주파는 전작권 환수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작권을 한국이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하다. 첫째, 위에서 말했듯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더라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같은 문제가 남는다.

둘째, 바로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평화를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호전적일 때도 있(었)다는 점이다.

역사를 보더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 제국주의자들 못지않게 호전적일 때가 몇 차례 있었다. 가령 이승만 정권만 하더라도 미국이 허를 내두를 정도로 호전적이었다.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을 때, 미국은



국제주의자들이 전작권이 환수돼야 한다고 보는 것은 그것이 반제국주의 전략전술에 유리해서다

김영삼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 때문에 군사 충돌이 확대되고 미국이 그에 끌려들어갈 것을 우려해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해 9월 <뉴욕 타임스>는 클린

턴 정부 인사들이 북한보다 오히려 남한을 문제를 일으키는 쪽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구나 한국 정부가 하위제국주의

로의 도약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가 평화를 담보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전작권은 미국에 있는 것보다 환수되는 편이 더 낫다.

이때 혁명적 국제주의의 전작권 환수 지지는 한국 국가의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좌파 민족주의적 지지와는 다르다.

국제주의자들이 전작권이 환수돼야 한다고 보는 까닭은, 그것이 반제국주의 전략·전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작권을 환수하면, 미국 제국주의 군대가 한국군을 지휘·통제할 때보다는, 제한적일지라도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대중 투쟁을 통해 작동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커진다.

미국 중간선거로 트럼프를 저지할 수 있을까

프랑스에서 ‘분노의 날’ 시위가 거리를 불태우던 10월 17일에 미국에서는 ‘왕은 없다’ 시위가 열렸다.

하지만 이날 시위는 재갈이 물린 시위였다. 주최 측은 각지 시위와 참가자들에게 오로지 중간선거 투표 호소만 허용했고, 이민 통제 규탄이나 이란 전쟁 반대 등 요구를 금지했다.

‘인디비저블’ 등 친민주당 엔지오들이 주도하는 주최 측은 심지어 시위대가 연방·지방 정부 청사나 일론 머스크 등 특정 인물의 사유지 앞에서 항의 시위도 못 하게 했다. 오로지 중간선거 투표만이 ‘왕’ 트럼프를 저지할 방법이라는 것이다.

물론 중간선거를 2주 앞둔 트럼프의 처지는 녹록치 않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 당시 유리함이 모두 흔들리는 상태인데, 그 주된 이유는 미국 제국주의의 취약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공언했던 우크라이나 전쟁(러시아와의 대리전) 휴전도, 중국 억지도 이루지 못했다. 특히 이란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다. 그 전쟁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려 하지만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모든 층위에서 격화되는 충돌의 여파가 미국 국내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의 중요한 힘이던 득표력이 흔들

리고 있다. 마가(MAGA) 운동은 중동 전쟁과 그 여파를 두고 분열해 있다.

현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1974년 이후 중간선거를 앞둔 정부를 통틀어 가장 낮는데, 특히 공화당 지지층에서 냉전 종식 이후를 통틀어 가장 낮다. 공화당은 하원(어쩌면 상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잃을 듯하다. 보통의 미국인들은 일말의 안도감을 느낄 것이다.

민주당은 의회 다수당이 되면, 정국의 주도권을 노리고 또 장차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에 제동을 걸려할 것이다. 또, 미국 자본주의·제국주의가 처한 난국을 타개할 나름의 방책을 관철하려 할 것이다(예컨대 동맹 네트워크 강화).

그러나 오바마·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친기업 정당인 민주당은 위기에 신음하는 노동자 등 서민들을 저버렸다. 그런 당이 용인할 조처들은 보통 사람들이 겪는 생활고를 완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특히 전쟁 문제에서 민주당은 트럼프의 반대향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끝내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을 굳게 지원한(그것 때문에 트럼프에게 정부도 빼앗겼다) 당이자, 트럼프(1기)의 중국 억지를 계

승·발전(바이든)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추구하는 당이고, 이란 전쟁도 그 기준으로 득실을 따진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의회의 승인 아래 전쟁을 치르라고 요구하고 기껏해야 “책임성 있는”(즉 미국의 패권을 보전하는) 종전을 거론한다.

민주당이 이란 전쟁을 미국의 제국주의적 위신이 추락한 상태로 사그라들게 하리라 여기는 것은 순전한 환상이다.

극우

그럼에도 트럼프는 이번 선거가 자신에게 닥친 정치 위기를 키우는 것을 막으려 기를 쓸 것이다. 그가 지난 선거 패배 때마다 그랬듯 극우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다.

벌써부터 트럼프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2020년 대선 당시 극우의 격동을 부추긴 수법을 되풀이하고 있다.

트럼프는 2018년 중간선거 패배 때 썼던 이민자 탄압 강화 수법도 되풀이하고 있다. 당시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트럼프는 중남미 이민자 유입을 문제 삼으며 이듬해 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금 트럼프의 ‘돌격대’ ICE가 반트럼프 정서가 강한 지역을 노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지난해 LA 항쟁 때부터 거듭 썼던 수법이다.

ICE는 이번 달에만도 뉴욕 주택가에 서 5세 아동이 탄 자동차에 총격을 퍼붓고, 워싱턴 DC에서 소말리아계 하원의

원 일한 오마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폭력은 극우를 재결집시키고 고무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맞설 힘은 의회 안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한편, 미국 민주당사회당(DSA)은 반트럼프 정서에 힘입어 좋은 선거 성적을 거둘 듯하다. 그러나 DSA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가하는 중도 정치의 한계선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DSA 간판 스타 조란 맘다니는 팔레스타인 연대 공약을 속속 거둬들이고 있다. 맘다니는 네타냐후가 뉴욕에 방문했을 때 트럼프와 회동하고, 가자 전쟁 3년 되는 10월 7일 시온주의자들의 ‘추모’ 행사에 참가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지탄을 샀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DSA가 가장 주력한 것은 반(反)극우 운동 건설이 아니었다. DSA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를 2028년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출마시키는 사전 선거운동을 발족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분출할 때 그 운동을 “유대인 혐오”라고 비난하고, 최근에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의 핵심 구호인 경찰 재정 삭감 등을 일컬어 “워크는 미친 짓이었다”고 폄하한 인물을 말이다.

격렬한 위기와 충돌 속에서 계속될 트럼프의 공격에 맞설 유일한 힘은, 지난해 LA와 올 초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것 같은 대중 저항을 되살리고 발전시키는 데에 있다. 프랑스의 저항에서 배울 때다.

김준호

미국의 쇠퇴, 이제 중국의 시대가 열리는가? 중국의 부상, 모순, 저항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에이드리언 버드**가 한 강연과 토론 정리를 글로 옮긴 것이다. 에이드리언 버드는 런던 사우스뱅크 대학교 부교수이자 사회과학부 학부장을 지냈고, 현재 동 대학의 객원 연구원이며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당원이자 마르크스주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위원이다.

중국의 부상, 모순, 저항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 역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부상했고 지금도 여러 면에서 부상 중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므로 간단히 다루겠다.

내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내가 어릴 때와 비교하면 오늘날 중국의 모습은 정말 크게 변했다. 과거에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가난한 농업 노동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현대식 교량과 고속철도를 갖춘, 여러 면에서 크게 발전한 나라다. 한국에 사는 여러분은 유럽인보다 이를 훨씬 생생하게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의 발전을 뚜렷이 보여 주는 사례 하나는 고속철도다. 2008년만 해도 중국의 고속철도망은 상하이 공항과 도심에 있는 노선 하나뿐이었다. 그 후 10년 만에 중국은 세계 최대 고속철도망을 구축했다. 노선 총연장이 세계 다른 모든 나라의 고속철도를 합친 것보다 길다.

중국이 세계 경제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1980년에는 약 1~1.5퍼센트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에는 20퍼센트에 육박한다.

이렇듯 중국의 부상은 명백한 현실이지만 거기에는 온갖 모순이 있다. 그 모순을 이해하려면 중국의 부상을

추동한 동력을 봐야 한다.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팽창을 추동한 첫째 요인은 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자 이주다. 조사마다 추산치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2억 7,000만 ~ 3억 명이 생산성이 낮은 낙후한 농촌을 떠나 대규모 공장과 일터가 있는 대도시로 이동했다.

이렇게 이주한 노동자(농민공)들은 대개 2등 시민 취급을 받는다.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가 출생지에 연동되는 중국의 호적 제도 때문에 농민공들은 도시에서 온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사회적으로 취약하고 공장과 일터에서 착취당하기 쉬운 대규모 노동력을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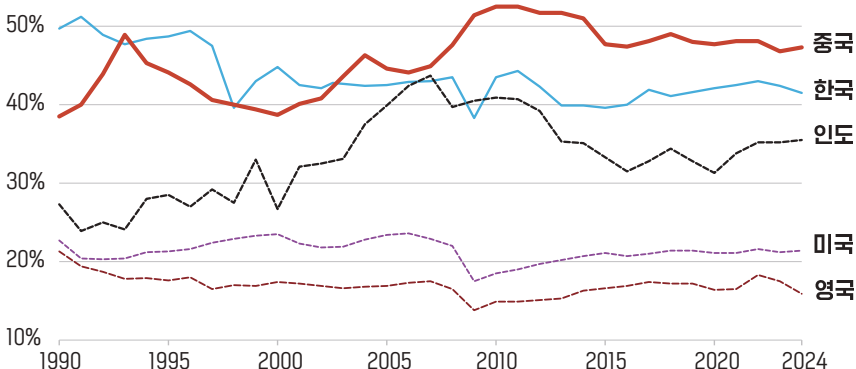
둘째 요인은 그들의 소비가 자본 축적에 종속됐다는 점이다. 그래프1은 중국 연간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가 자본 축적에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어마어마한 양인데,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이는 심대한 과잉 축적 위기를 낳을 조건이다.

셋째 요인은 수출이다. 마오쩌둥 사후 개혁기가 시작된 1978년 중국의 수출 규모는 미미했다. 그러나 2010년 경부터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됐고, 2025년에는 수출액이 3조 7,700억 달러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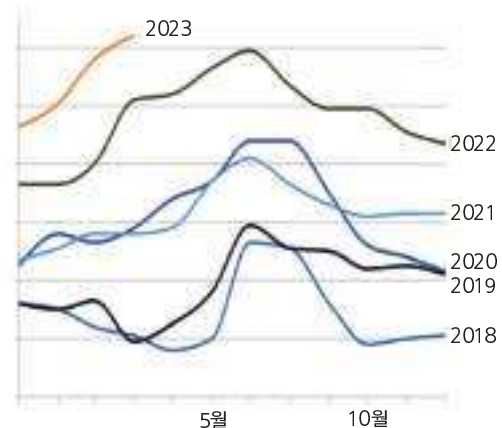
중국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심중팔구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을 넷째 요인은 계획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계획?’이라고 물음표를 붙이겠다.

중국 국가가 연간 계획과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의 목표와 국가가 자원을 집중하려는 부문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계획을 달성하는 일은 지방정부와 지방 당국에 내맡겨진다. 그래서 “하나의 국가, 32개의 경제”라는 어느 저술가의 말처럼 엄청난 중복과 낭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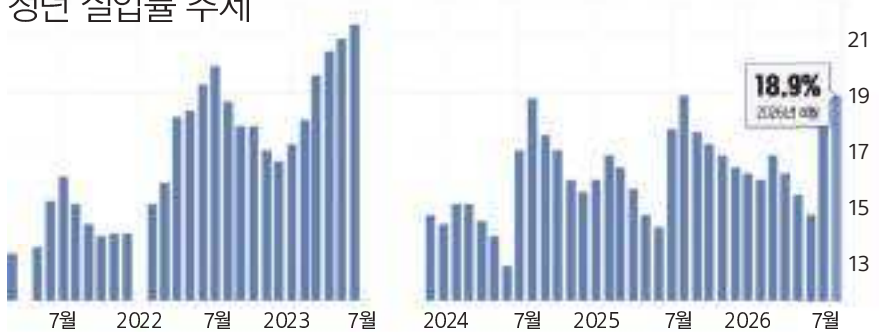
그래프1)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축적률 비교



그래프2) 연도별/월별 청년 실업률



그래프3) 청년 실업률 추세



부상이 낳는 모순

이제 모순의 여러 측면을 조명해 보겠다. 순서에 큰 의미는 없는데, 아마도 여러분은 이 모순을 드러낸 사건과 변화들을 익히 알고 있을 듯하다.

첫째, 부동산 문제다. 지난 30년 넘게 이어진 주택 건설 호황은 이제 사실상 완전히 멈췄다. 신규 주택 건설이 급감했다.

수많은 주택이 비어 있다. 2024년에는 팔리지 않은 주택이 8,000만 채에 달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중국에서 주택의 96퍼센트가 민간 소유라는 점이다. 자본주의 야수의 심장이라는 미국에서도 그 비율은 65퍼센트다.

주택은 경제의 나머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적 위치에 있다. 사람들은 집을 사면 소비재를 사서 그 집을 채운다. 그래서 주택 부문이 위기에 빠지면 나머지 소비재 제조업도 위기에 빠진다. 전체 경제의 약 30퍼센트가 주택과 주택 관련 산업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듯 중요한 주택 부문이 침체에 빠지면 더 광범한 경제가 고통을 겪는다. 이는 경제 성장률의 저하로 나타난다. 그런데 공식 통계마저 부풀려진 것일 수 있고, 실제 성장률(1~2퍼센트)은 공식 통계(4퍼센트)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흥미로운 관측도 있다.

물가는 실제 상황이 공식 통계로 나타나는 것보다 심각하다는 추측을 뒷받침한다. 중국은 지난 2년간 디플레이션을 겪었고 그 상황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와 21세기 초 일본의 디플레이션과 비슷한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최근의 변화를 살펴봤는데, 좀 더 장기적인 변화도 있다. 특히 인구 압박이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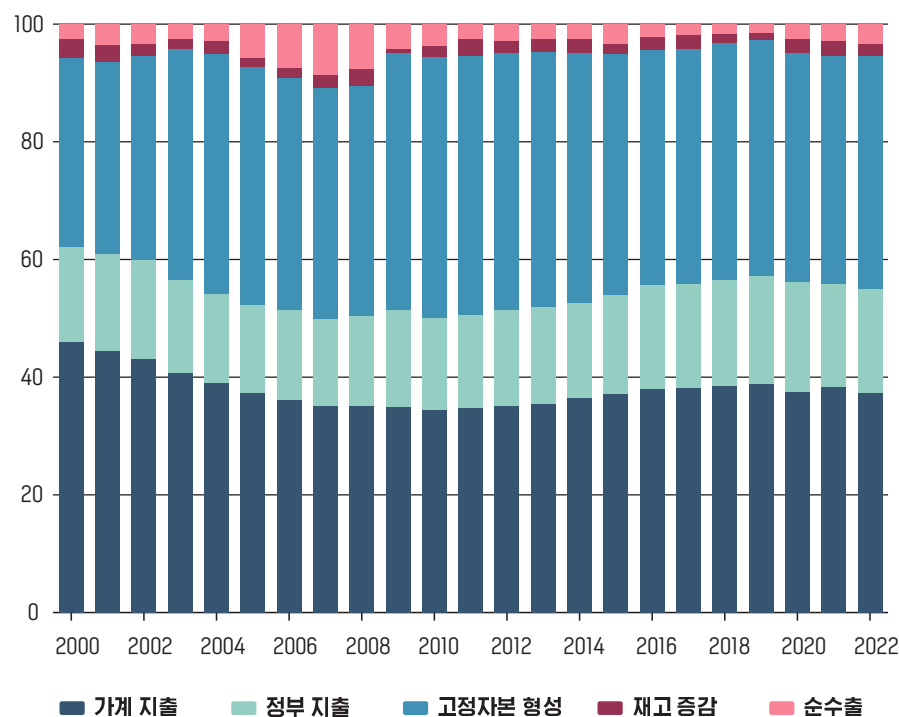
농민공의 이주는 생애에 한 번 있는 현상이고 지속·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농촌에서는 잉여 노동력이 상당히 빠져나간 상태다.

도시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다른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인구 분포가 점점 노년층으로 쏠리고 있고 노인이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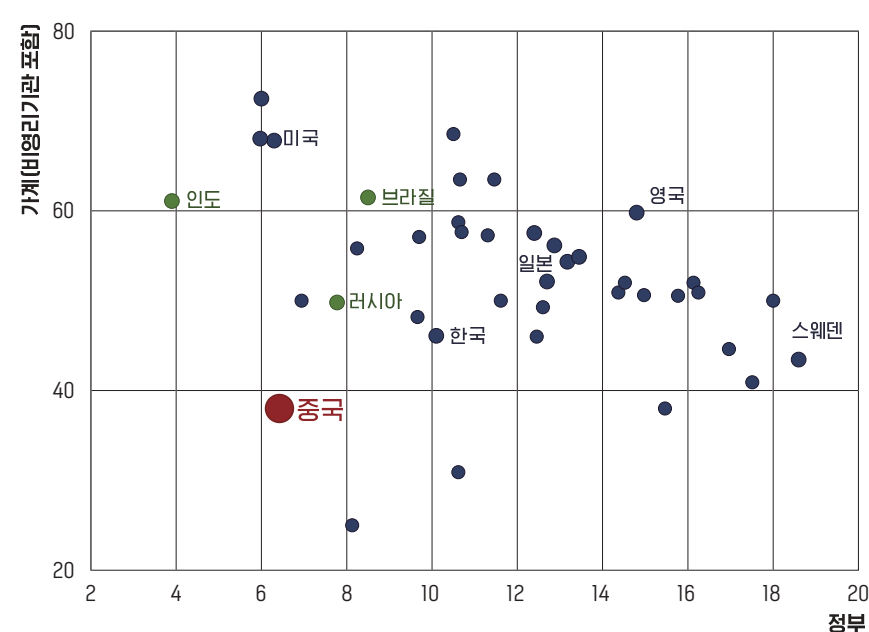
최근 한 경제지는 이 문제를 시진핑이 AI를 적극 지원하는 한 이유로 꼽았다. 제조업에서 일할 노동자가 점점 줄어들 테니 로봇과 AI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고령화, 인구 감소의 대응책이라는 것이다.

큰 고통을 겪는 층 하나는 청년 대졸자들이다. 연도별·월별 청년 실업률을 나타낸 그래프2를 보면, 청년 실업률

그래프4) 중국 GDP 지출 구성



그래프5) 개인 소비*의 GDP 비중



* 개인 소비 = 가계가 소비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계가 직접 구매하는 재화·서비스뿐 아니라, 보건·교육 등 비영리기관이나 정부가 개인 소비를 위해 제공하는 것도 포함.

▶ 11면에서 이어짐

은 졸업 시즌에 가장 높은 경향이 있다.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얻기 전이기 때문인데, 이제는 일자리를 얻는 졸업생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프3은 여러 해에 걸친 추세를 보여 준다. 이 추세는 여기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그래프 안의 공백은 청년 실업 증대로 곤혹스러워하던 정부가 통계 발표를 중단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 사이에 정부는 계산법을 고친 뒤 다시 발표를 재개했다. 그 때문에 실업이 잠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마저도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몇 년 전에는 분노한 청년들 사이에서 ‘졸업은 곧 실업’이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한다.

취약해지는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취약점 하나는 수출이나 자본 축적에 비해 내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산당 지도부는 이르면 2002년부터 내수와 가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경제를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시진핑의 발언도 그것의 최신 사례일 뿐이다. 그러나 그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그래프4를 보면 가계 소비가 전

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000년보다 적다. 반면, 자본 축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내수가 취약한 이유 하나는 개인·가계 소비를 뒷받침하는 복지 지출이 적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무슨 사회주의이기는 한 것이냐는 문제를 다시금 제기한다.

물론 우리는 중국이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 지지자들에게 “중국은 도대체 무슨 종류의 사회주의 사회이길래 주택 대부분이 민간 소유이고, 교육·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도 거의 없고 개인이 자비로 부담하는 것인가” 하고 물어야 한다.

개인·가계 지출 중 정부 지원의 비율이 중국보다 적은 주요국은 거의 없다. 브릭스(BRICS) 회원국 중에서도 인도만이 중국보다 낮다.(그래프5)

이런 상황이 앞으로 개선될까? 최근 시진핑은 유럽식 복지국가가 노동자들을 나태하게 만든다며 이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연설했다. 마거릿 대처, 로널드 레이건, 도널드 트럼프, 신(新)우익과 다름없는 주장이다.

늘어나는 부채

중국이 직면하기 시작했고 심각한 계 계겨게 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 위기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

다. 바로 부채 규모의 증대다.

부채는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좌파는 이것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먼슬리 리뷰》의 필자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도 부채 규모가 늘고 있다는 이들의 지적은 옳다. 이것은 자본주의라는 세계 체제 전반이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에 약 130퍼센트였던 중국의 총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이 2025년에 300퍼센트를 넘긴 것은 중요한 변화다.

문제의 심각성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대부분의 부채는 한 국가 기관이 다른 국가 기관에게 진 빚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 이 국가 기관들은 지역별로 나뉘어서 경쟁한다.

《먼슬리 리뷰》의 견해와 달리 부채가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 주는 사례 하나는, 부채 증대와 함께 저항과 노동자 투쟁이 증대한다는 점이다.

부채 부담에 시달리는 지방 정부들은 복지를 삭감하고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방정부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쟁의를 낳고 있다. 그리고 지방 정부들은 경쟁 속에서 각자의 재정을 충당하려고 국가 자산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은 첨단 기술

을 갖춘 정상적 자본주의 경제가 되고 있다. 서유럽이나 미국에 견줘 국가가 경제에서 더 작은 역할을 하는 부문도 있다. 전반적인 규제는 서구보다 좀 더 엄격하지만 국가 생산은 전보다 줄어들었고, 국가 복지는 확실히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부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기업들이 부채로 자금을 수혈받아 연명하는 ‘좀비 자본주의’의 모습을 빼닮은 것이다.

일자리가 느는 부문도 있는데, 규제가 적고 유연한 ‘긱 경제’ 부문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차량 사이를 누비며 아파트와 일터에 음식을 배달하는 위험한 일자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노동자들은 최근 안전한 노동 조건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노동 규제가 가장 완화되고 유연한 부문이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징후다.

중국 자본주의의 위기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미국과의 경쟁 때문이다.

중국이 가계 지출을 늘리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세계 시장, 군사 기술, 첨단 기술 우위 등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초고도 축적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는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아래로부터의 저항도 격화할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저항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서(적어도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세계 다른 모든 자본주의에서 익히 봐 왔던 모순들이 빚어지고, 그런 모순들이 저항을 촉발하고 있다.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항의가 벌어졌다. 널리 알려진 사례는 홍콩이다.

홍콩이 갈수록 중국 본토의 통치 방식에 편입되면서 민주적 표현을 위한 작은 여지마저 사라지자, 홍콩 사람들은 여기에 저항했다. 널리 알려진 우산 운동이 있었고, 중국의 국가보안법을 홍콩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도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 항의 운동은 현재로서는 완전히 진압됐다. 가장 뛰어난 홍콩 마르크스주의 조직가·운동가 일부는 이후 홍콩을 떠나 영국 등지에서 망명 중이다.

그럼에도 아래로부터의 저항은 지속되고 있다. 예컨대 페미니스트들과 여성들의 항의가 있다. 이 운동은 상당히 발전해 있지만 잘 조직돼 있지는 않다. 전국 수준의 여성 운동을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운동 등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저항들을 서로 분리시키고 고립시키고 지역 수준에 머물도록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형태의 저항도 있다.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코로나 록다운 기간에 중국 곳곳에서 벌어진 록다운 반대 시위다. 시진핑의 극단적인 록다운 방식이 촉발한 시위였다.

이 항의는 2022년 말 신장 우루무치 화재에 대한 항의로 이어졌다. 당시 그 화재로 위구르 무슬림 10여 명이 숨졌다. 록다운을 이유로 경찰이 이들을 아파트 안에 가두지 않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

여기에 항의해 시위가 벌어지자 신장에서 사상 최초의 연대 행동이 벌어졌다. 인구의 다수이고 그 지역에서 식민 정착자로 불리는 한족 주민들이 시위에 나선 것이다. 한 시위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위구르 무슬림들이 시위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시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연대는 중국 곳곳의 50개 도시로 확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 투쟁. 이 투쟁은 패배했지만 아래로부터의 저항 잠재력은 더 커졌다

산됐다. 주로 대학 도시였고, 많은 경우 여성들이 앞장섰다. 젊은이들이 록다운과 위구르 무슬림 천대 모두에 항의했다.

파업 지지 시위나 거리 시위에서 여성들이 선두에 서는 것은 중국에서 꽤 널리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종의 방어 전술인데 경찰이 강제 해산을 시도하면 여성들이 전면에서 나서서 경찰을 향해 “성추행하지 마라!” 하고 외쳐 경찰을 움찔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대 그들’이라는 초보적이지만 어느 정도 발전한 계급의식이 엿보인다. 그것은 젠더를 통해 표현되지만 그 바탕에는 아래로부터의 연대가 있다.

그뿐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환경, 노인 권리 증진 및 노인 지원 등 사회의 다른 영역들에서도 항의가 빈발했다. 지방은행이 문을 닫자 사람들이 “우리 돈을 돌려 달라” 하고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노동자 저항

우리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저항에 특별한 관심을 둔다. 중국에서는 2007~2016년 동안 거대한 파업 물결이 일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시진핑이 권위주의를 강화하며 노동자 운동을 탄압했다.

그러나 상황이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끝날 무렵 록다운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 선전 공장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공장을 탈출해 경찰과 충돌했다. 이는 비슷한 다른 수많은 투쟁의 마중물이 됐다.

그래서 중국 노동운동을 연구하는 미국 학자 일라이 프리드먼은 2023년 초에 “코로나19 이후 공장 파업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관측했다.

당시 나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관측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품었지만, 실제로 파업이 부활하고 노동쟁의 빈도도 전반적으로 늘었다. 홍콩에 기반을 두고 중국 노동운동의 성장을 추적하던 ‘차이나 레이버 불레틴’에 따르면, 중국의 노동자 행동은 2023~2025년 사이 갑절로 늘었다.(중국 바깥의 좌파들에게 ‘차이나 레이버 불레틴’은 중국 상황을 전하는 소중한 매체였는데 2025년 5월에 폐쇄됐다. ‘차이나 레이버 불레틴’ 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중국공산당이 비판을 일절 불허하며 압박한 탓이다. ‘차이나 레이버 불레틴’의 폐쇄는 노동운동의 상대적 취약성을 보여 준다.)

파업 노동자들이 다시 무대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 두 가지 사례를 들겠다. 하나는 지난 1월 청소 노동자들이 도로를 봉쇄해 위력을 과시한 것이다. 둘째, 푸양 버스 노동자들이 지방정부에 항의하는 구호를 버스에 내건 것이다. “16개월째 임금 체불. 우리 돈 내놔라.”

이 파업들은 방어적 파업이고 상대적 약세에서 나오는 투쟁이다. 16개월 동안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이 벌이는 운동을 강력한 운동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분명 투지를 보이고 있고, 그들의 분노와 투쟁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노동자들의 투쟁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방어적일지라도 실제로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 자본주의가 직면한 모순을 보여 준다.

그래서 시진핑이 지난 10년 동안 전보다 권위주의를 훨씬 강화한 것이다. 앞서 시진핑의 파업 물결 탄압을 언급했지만, 국가보안법 문제도 있다.

중국의 국가보안법은 세 명 이상 모인 모든 공개 단체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당국의 통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는 기업과 대학 등 온갖 단체가 해당될 수 있다. NGO들, 특히 중국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 운동을 지원하는 중국 본토 바깥 NGO들의 활동이 분쇄됐다.

권위주의 강화를 보여 주는 한 사례는 신장 지역에서의 탄압이다. 신장에서 거주하고 연구하며 그곳의 실상에 관한 탁월한 책을 쓴 저자들은 신장·위구르 지역 자본주의의 성격을 ‘테러 자본주의’로 규정했다.

요컨대 지배계급의 힘이 강화돼 왔다. 하지만 우리 편도 저항 능력이 있다. 그 저항을 짓누르기 위해 자행되는 일 자체가 저들이 우리 편의 잠재력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마무리하겠다. 바닥을 치면 남은 것은 반등뿐이라는 말이 있다. 영시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다. “겨울이 오면 봄도 머지않으리.” 다시 때가 올 것이다. 노동운동을 다시 키우고, 여성운동을 다시 키우고, 천대에 맞서는 다른 모든 운동들도 다시 키울 때가 올 것이다.

데이터에서도 나타나듯 중국 자본주의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국주의 간 경쟁이 그 위기를 한층 첨예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투쟁의 봄도 머지않아 올 것이다.

녹취·번역 김준효

에이드리언 버드의 토론 정리를 포함한 기사 전문을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3차 공동행동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 500여 명이 차별을 반대하며 항의하다

권준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10월 18일(일)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전국 이주노동자 3차 공동행동대회가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500명가량이 모여 활기차게 집회를 진행했다.

지난 6월 현대중공업 직고용 계약직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이 사용자 측의 근로계약서 개악 갱신 요구를 반대하며 단호하게 투쟁에 나섰다. 개악된 계약서는 밥값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임금 삭감, 연 2회 인사평가와 그에 따른 임금 차등 인상, 성과급 차등 지급, 저성과자 해고, 성과급 상한제 등을 담았다.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의 투쟁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투쟁에 참가하도록 고무했다. 사용자 측은 부당하게 공제한 밥값을 돌려주고 성과급 차등 지급을 폐지하는 등 일부 양보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급 삭감, 연 2회 인사평가와 그에 따른 임금 차등 인상, 저성과자 해고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나쁜계약 철회와 재계약 보장을 위해 집단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스리랑카인 노동자 위제싱하 현대



투쟁의 자극제 이주노동자들

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대의원은 이렇게 연설했다.

“회사는 우리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앞으로 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는 탈퇴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협박과 압박을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합니다.”

인도네시아인 노동자 수십 명도 집회에 참가했다. 이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인도네

시아인 이주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되찾기 위해 한국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집단 진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단결해 투쟁할 것입니다.”

심각한 차별

한 러시아인 노동자는 2019년부터 일해 오면서 부당한 대우와 심각한 차별을 겪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사장에게 폭행당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자신을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이후 사용자 측은 그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4대보험도 취소했다. 또,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겠다고 협박하며 고소 취하를 압박했다. 퇴직금과 상여금이 삭감됐고 연차수당도 빼앗겼다. 근로계약서가 있지만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 발언을 들으며 분노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영상 발언을 통해 아파도 비자 걱정, 일자리 걱정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을 말했다.

금속노조 일강지회 조합원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

하고 기본권을 탄압하는 사용자 측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서현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활동가는 1년 전 출입국 당국의 공장 단속으로 사망한 두안 씨를 기리며, 오는 25일 두안 1주기 집회에 참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현대중공업 옆 도로를 따라 행진했다. 집회와 행진은 활력 있게 진행됐다.

집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투쟁을 이어 가야 할 필요성도 분명해졌다.

이날 집회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현대중공업 직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자극이 돼 현대중공업 하청 소속 E-7-3 비자 노동자와 E-9 비자(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겪는 저임금, 산재, 안전, 차별 대우 문제들도 공론화됐다는 점이다.

정주 노동자들도 겪고 있는 문제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증폭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정주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가 단결해 싸우고 연대를 확대해 현장의 세력관계를 바꿔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재계약 보장, 차별 폐지를 이루기 위한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현대중공업노조 부분 파업 재개와 지부장 크레인 농성

역대급 조선업 호황에 맞게 임금 대폭 올려라

10월 18일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진행한 ‘전국 이주노동자 3차 공동행동 대회’가 끝나고 얼마 뒤 김동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이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또 지부는 이번 주에 매일 7시간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다.

2026년 단체협상 의견일치안이 부결된 뒤 사용자 측은 추가 인상에 소극적이었지만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열망이 더 커진 상황에서 노조가 투쟁을 재개한 것이다.

올해 노조 집행부가 1차 합의했던

기본급 인상안은 12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는 삼성중공업 13만 1,786원보다 작았다. 심지어 한화오션에서는 13만 8,000원이 넘는 사측 제시안을 노조 측에서 반려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내에서는 동종사보다 부족한 기본급 인상액에 대한 불만이 크다.

여기에 구 미포조선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마스가 프로젝트 수행의 일환으로 사용자 측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 미포조선을 합병했다. 통합 과정에서 기존

의 단협 격차를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컸다.

그러나 지난 의견일치안에서 구 미포조선 노동자들의 단협 중 일부가 오히려 후퇴하는 일이 벌어졌고,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지금 조선업은 호황이다. 역대급이라 불릴 정도의 호황이다. 2008년 이후 조선업 불황기 시절, 임금 동결 4회를 포함해 기본급이 5만 원 이하로 인상된 해가 9번이나 될 정도로 사용자 측은 기본급 인상에 소극적이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으로 큰 고통

을 받았다. 하지만 총수 일가는 배당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챙기는 것을 보며 노동자들은 분노했었다.

그러나 호황기가 돌아왔어도 사용자 측은 여전히 기본급 인상에 매우 인색하다. 이런 상황에서 동종사가 더 높은 수준의 기본급을 인상하거나 제시받으니 노동자들의 불만이 매우 큰 것이다.

투쟁을 재개한 만큼 임금을 대폭 올리고 단협 상향평준화도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이 강화돼야 한다.

▶ 15면으로 이어짐

기간제교사들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그대로인 차별을 규탄하다

10월 17일(토)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위원회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기간제교사 5대 차별 폐지 촉구 집중 집회’를 열었다.

주말임에도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들을 비롯해 연대하러 온 학생, 학부모, 노동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사회운동 활동가들 수십 명의 연대와 지지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 집회의 활력을 더했다.

참가자들은 기간제교사에 대한 과도한 마약 검사 중단, 정기호봉승급 보장, 자동계약해지 조항 삭제,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보장, 장기재직휴가 보장 등 5대 차별 폐지를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약속했다. 그러나 전국 8만 4,000여 명의 기간제교사들은 정규교사와 똑같이 수업과 담임, 생활지도를 하고 기피 업무를 도맡으면서도 임금·복지·고용 전반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

박해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규탄했다.

“보직을 맡은 기간제교사가 3년 새 2.2배나 늘었다. 학교의 핵심 업무를 맡기면서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그대로 두는 것이 정당한가.

“1급 정교사 자격연수(1정 연수)와 정근수당 차별 폐지 등 그동안의 변화는 우리가 단결해 투쟁한 결과다.

“더 나은 교육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싸우는 프랑스 교사·학생들처럼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단결해 싸우자.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동일한 교단에 섰다면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 교원일 때는 호봉 승급이나



기간제교사들은 투쟁으로 변화를 쟁취해 왔다. 10월 17일 청와대 앞 집회

자동계약해지, 마약 검사 같은 용어들을 잘 떠올리지도 않는다. 정규 교원들이 장기재직휴가가 생겼을 때 언제 적용받을지 생각할 동안 기간제교사 동지들은 또 다른 비참함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기간제교사 차별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50대 후반의 한 기간제교사는 6개월 휴직 후 복직해 같은 학교에서 만 12개월 근무를 완벽히 채웠으나, ‘계약 기간 중에는 호봉을 재확정하지 않고 고정급으로 한다’는 지침 때문에 정기승급을 거부당한 사례를 폭로했다.

“기간제교사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무게는 정규직 교사의 아이들보다 가벼운가. 아이들에게 ‘노동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정작 현장에서 차별받고 눈물 흘리는 비극을 끝내야 한다.”

기간제교사에게만 과도한 마약 검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성토가 나왔다. 정규교사는 임용 시와 1정 자격 취득 시에만 검사를 받지만, 기간제교사는 연이어 재계약이 이뤄져도 매번 검

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2월 마약 검사 부담 완화를 입법 예고했다가 슬그머니 빼더니, 오히려 올해 6월 검사 유효 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단축해 부담을 배가시켰다.

정규교사 조기 복직 시 계약을 일방해지하는 ‘자동계약해지’ 독소조항과 복지 배제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박영진 전교조 기간제교사위원장은 “다가오는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 날인데,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계약 기간조차 기간제교사는 피해 간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방학 전 자동계약해지를 당한 기간제교사는 296명에 달한다.(출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인터뷰 영상을 통해 증언한 한 기간제교사는 학기 말 생활기록부 작성조차 못 마친 채 계약해지 당했지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문이 나고 낙인 찍혀 재취업하지 못할까 봐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말했다.

한 특수학교의 기간제교사는 “우리 학교는 교직원 100명 중 53명이 기

간제교사”라며, “환산 경력이 17년임에도 ‘동일 학교 근무기간(4년으로 제한)’만 따져 장기재직휴가에서 제외되고 공무원·대학 조교도 가입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마저 배제돼 질병·주거 대출 등 기본 복지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청소년 모임 ‘어부바’의 문성호 학생이 연대 발언을 했다.

“수업을 들으며 기간제 선생님이라고 차이를 느낀 적이 없고 오히려 가깝게 소통하며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신 기억이 많다.

“계약기간 보장은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자 학생의 배울 권리를 지키는 일이다.”

학생이 직접 선생님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자 참가자들이 환호했다.

국회 앞 농성 41일 차 현장에서 달려온 박은경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상임집행위원장과 김진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도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과 교육재정 축소를 규탄하며 연대를 약속했다.

나유정

▶ 14면에서 이어짐

지도부는 크레인 고공 농성을 진행하며 주변에 농성장을 차렸다. 그리고 블록 반출을 막고 생산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파업 참여자를 더 확대시키고 생산의 타격을 최대한 줄 때 사측이 받는 압력이 더 커질 것이다.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투사들의 파업 참여 독려 활동이 중요하다.

20일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인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노동자 60여 명과 하청노동자가 파업 농성장에 지지 방문을 왔다. 정말 고맙고 큰 힘이 됐다. 이주노동자 대표 차리타 씨는 이주노동자들이 투쟁할 때 연

대한 현대중공업지부에 고마움을 표현했고 이주노동자들도 함께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하청과 이주노동자들로 연대를 확대시키고 나아가 공장 밖으로도 지지와 연대를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권준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겁 많은 민주당, 조직대 너머 이재명을 겨누는 우파

★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이 말한다 “이제는 어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잔꾀 부리며 이란 전쟁 파병 준비하는 이재명 정부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해협 어귀인 오만만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하는 파병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10월 15일 보도됐다.

19일에는 파병될 해상초계기의 기항지가 지부티의 한 미군기지일 것이라는 세부적 보도까지 나왔다.

정부는 이번에도 파병을 안 한다고는 말하지 못하고 “검토 중이나 세부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9월 초 해상초계기 등 군 자산 파병 검토가 보도됐을 때도, 아랍에미리트 현지조사단 파견이 드러났을 때도 똑같이 답했다.

이런 패턴은 정부가 파병 여부가 아니라 파병 형태(파병지, 파병 전력 등)를 고민하며 여론을 떠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번 보도는 한미 관계에서 잇달아 불협화음이 나오던 가운데 나왔다. 그 불협화음은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잇따라 발표하고, 6월 한미일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회의에서 한국 국정원을 배제하고, 정동영의 ‘구성 핵심설 발언’을 문제 삼으며 대북 위성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전 민주당 대표 정청래의 미국 비자 발급을 보류해 국정감사 방미를 무산시킨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미국을 향해 파병을 결코 접지 않았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독자적 이익

이재명은 한미동맹을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국익’)의 대들보로 여긴다. 그러나 하위 제국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한국의 독자적 이익을 추구하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관리하고자 한다.

예컨대 얼마 전 한국 컨테이너선이 처음으로 북극 항로를 왕복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협조 아래 가능했다. 한국 항구에서 선적된 경우 등 석유 제품이 대량으로 러시아에 공급된 직후였다.



사단출처 방위사업청

오만만은 호르무즈해협의 입구로, 미군의 핵심적인 봉쇄 작전 현장이다

러시아와의 협조 속에서 북극항로에 진출하고, 미국을 위해서는 오만만에 군함을 보내는 이러한 두 길 보기는 원칙 있는 반제국주의가 아니라 오로지 하위 제국주의를 지향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런 줄타기를 위해 정부측은 오만만이 마치 호르무즈해협과 동떨어진 지역인 것처럼 흘린다. 그러나 호르무즈해협이 아라비아해로 나오는 출구가 오만만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호위는 오만만에서 시작되거나(들어가갈 때) 오만만에서 끝난다(나올 때).

육지인 DMZ에서도 ‘누가 선을 넘었느냐’를 두고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표지판 하나 없는 바다에서는 충돌에 휘말리기 더 쉬울 것이다.

추가 파병될 해상초계기의 기항지로 유력한 곳이 애초 현지조사단을 보냈던 UAE가 아니라, 오만만에서 훨씬 더 먼 지부티라는 점도 시사적이

다. 파병 한국군이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위험을 전제로, 탄도미사일 사거리에서 최대한 벗어나려는 계산일 것이기 때문이다.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면서 “청해부대 활동 강화에 대해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한 것도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사례다. 그 둘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고 실제로는 뒷말만 현실이 되고 있다.

또한 파병될 해상초계기의 기항지가 미군기지라는 점은 사실상 미군 작전 체계에 편입된다는 방증이다. ‘외국군 지휘 하 배속은 없을 것’이라던 약속과도 다른 것이다.

청해부대가 오만만으로 ‘종전 후’에 이동할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전혀 믿을 게 못 된다. 이를 최초 보도한 <경향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했지만, 이후 나온 타 언론사 보도나 국

방부 공식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빠졌다. 결국 정부가 여론을 떠보려고 흘린 말인 것이다.

파병동의안의 본질은 이동 시점이 아니라 호르무즈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합류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 동의만 받아 두면 정부는 ‘국민 안전’이나 ‘종전’을 고무줄처럼 해석해 얼마든지 오만만에 개입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핵심은, 미군의 부름을 받고 온 동맹국 군함이 이란 코앞에 떠있는 것 자체가 봉쇄와 압박의 일부이고, 미국의 침략 전쟁에 정치적·군사적 지지를 제공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실제로 군 안팎에서도 이재명의 파병 의도를 “미국의 압박에 대한 ...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경향신문> 10월 19일 자).

9월 7일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바가이는 한국어로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하고 경고하며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해협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거나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는 침략 가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란이 언급하지 않은 ‘오만만까지’를 선택해 이란과의 전쟁 참전이 아니라는 신호도 보내려는 것이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는 바는 오만만도 미군의 핵심적인 봉쇄 작전 현장이라는 것이다. 미군은 10월 10일 오만만에서 봉쇄선을 넘으려던 화물선을 전투기로 타격했고, 6일에는 자국 함정을 “감시했다”는 이유로 이란 연계 목조 선박을 격침했다(미군 발표).

한국이 추가로 보내려는 P-8A 해상초계기가 하는 일이 직접적인 군사 작전을 위한 공중 ‘감시’ 활동이다. 전투 행위와 직접 연계된 활동이다.

요컨대, 이란 전쟁 파병은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을 도우려는 것이다. 파병 반대 운동은 ‘종전 후’니 ‘오만만까지’니 하는 기만을 들춰 내고, 이재명 정부의 파병에 단호하고 일관되게 반대해야 한다.

김종환